

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발의자 : 금광연 의원

제출일 : 2022. 11. 21

1. 제안이유

- 가.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이 제정된 것에 맞추어,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·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「하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」를 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함.
- 나.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개정으로 농수산물·가공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허용하는 기간이 정해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」과 관련 법 체제 통일성 확보 및 제도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를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(안 제1조~제3조)
- 나.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(안 제4조~제6조)
- 다. 부당이득의 수수금지에 관한 규정(안 제7조~제10조)
- 라.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에 관한 규정(안 제11조~제15조)
- 마.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에 관한 규정(안 제16조~제17조)
- 바.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(안 제18조~제31조)

3. 검토의견

-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의 제정(시행일 : 2022. 5. 19.) 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, 의장 등의 민간

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 같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‘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 및 신고 서식 등’을 삭제하였음.

- 또한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개정(시행일 : 2022. 1. 05.)에 따라 농수산물·가공품의 가액범위를 ‘설날·추석 전 14일부터 설날·추석 후 5일까지’는 두 배(10만원→20만원)로 상향 허용하는 내용을 [별표 1]에서 규정함으로써,
- 하남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분상·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행동기준 마련으로 의회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검토 결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절차나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관련법령 발췌

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

[시행 2022. 6. 8.] [대통령령 제32689호, 2022. 6. 7. 일부개정]

제17조(사교·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 등)

- ① 법 제8조제3항제2호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”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. <개정 2022. 1. 5.>
- ②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·추석을 포함한 기간”이란 설날·추석 전 24일부터 설날·추석 후 5일까지(그 기간 중에 우편 등을 통해 발송하여 그 기간 후에 수수한 경우에는 그 수수한 날까지)를 말한다. <신설 2022. 1. 5.> [제목 개정 2022. 1. 5.]

참고1

기관별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 참고자료 [국민권익위원회]

□ 추진배경

-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「공무원 행동강령」(‘18.1.16.개정 ‘18.4.17.시행)과 「지바회의회의원 행동강령」(‘18.12.24.개정, ‘19.3.25.시행) 등에 이해충돌방지규정*을 우선 도입·시행함

*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,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
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이 제정(‘21.5.18.공포, ‘22.5.19.시행)된 것에 맞추어, 동 법률의 내용과 유사·중복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및 「지바회의회의원 행동강령」 개정(‘22.6.2.개정·시행)

< 공무원 및 지바회의회의원 행동강령 삭제 규정 현황 >

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삭제 조항(8개)	「지바회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삭제 조항(7개)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(§5) ▶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(§5의2) ▶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(§5의3) ▶ 가족 채용 제한(§5의4) ▶ 수의계약 체결 제한(§5의5) ▶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(§5의6) ▶ 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(§13) ▶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(§16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(§4) ▶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(§4의2) ▶ 직무 관련 조언·자문 등의 제한(§4의3) ▶ 가족 채용 제한(§4의4) ▶ 수의계약 체결 제한(§4의5) ▶ 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 등(§10) ▶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(§16)

-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 개정 등을 통해 ‘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’ 상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정비토록 함으로써,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이해충돌방지법으로 일원화 도모

□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등 개정사항 안내
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및 「지바회의회의원 행동강령」 개정사항

- 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과 중첩되는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

※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상 이해충돌방지규정(8개 조항) 및 「지바회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상 이해충돌방지규정(7개 조항) 삭제

-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 및 개념 명확화

- ※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5조의4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4조의4의 ‘가족 채용 제한’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‘산하기관’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, 다른 관련 조항의 ‘산하기관’ 용어를 정비함
- ※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5조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4조의 ‘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’ 규정 삭제로 인해 동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‘서면’ 용어 설명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, ‘서면’ 용어 설명 규정을 다른 관련 조항으로 이동시킴
- ※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 및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제10조의3의 ‘전가’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‘전가(轉嫁)’로 한자 병행 표기함

○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 개정사항

-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이해충돌방지 관련 규정* 및 서식** 삭제

- *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 제9조(직무관련자가 되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), 제10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,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), 제11조(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), 제12조(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의 신고), 제20조(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) 삭제

**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등 별지 제3·4·5·6·7·8·9·19호 서식 삭제

- 「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」 정비(별표1)

- ※ 표준안 제5조(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), 제6조(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), 제7조(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), 제8조(가족 채용 제한), 제9조(수의계약 체결 제한), 제10조(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), 제20조(공용재산의 사적 사용·수익 금지), 제26조(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) 삭제

□ 공공기관 협조 요청사항

○ 각급 기관별 자체 행동강령 내 이해충돌방지규정 삭제

- ※ (중앙행정, 지자체, 교육청, 공직유관단체)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및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을 참고하여 이해충돌방지규정 및 관련 서식 등 삭제 (지방의회)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및 「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」을 참고하여 이해충돌방지규정 및 관련 서식 등 삭제

○ 자체 행동강령 개정 완료 후 개정 결과를 권익위로 통보

참고2

공무원 ·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

공무원 행동강령			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		
연번	행위기준	개정 여부	연번	행위기준	개정 여부
1	●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처리	유지	1	●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	유지
2	●특혜의 배제	유지	2	●인사 청탁 등의 금지	유지
3	●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	유지	3	●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	유지
4	●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	유지	4	●이권 개입 등의 금지	유지
5	●인사 청탁 등의 금지	유지	5	●알선·청탁 등의 금지	유지
6	●이권 개입 등의 금지	유지	6	●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	유지
7	●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	유지	7	●사적 노무 요구 금지	유지
8	●알선·청탁 등의 금지	유지	8	●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	유지
9	●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	유지	9	●금품등의 수수 금지	유지
10	●사적 노무 요구 금지	유지	10	●국내외 활동 제한 등	유지
11	●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	유지	11	●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	유지
12	●금품등의 수수 금지	유지	12	●영리행위의 신고	유지
13	●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	유지	13	●경조사의 통지 제한	유지
14	●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	유지	14	●성희롱 금지	유지
15	●경조사의 통지 제한	유지	15	●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	삭제
16	●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	삭제	16	●의장 등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	삭제
17	●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	삭제	17	●직무 관련 조언·자문 등의 제한	삭제
18	●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	삭제	18	●가족 채용 제한	삭제
19	●가족 채용 제한	삭제	19	●수익계약 체결 제한	삭제
20	●수익계약 체결 제한	삭제	20	●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	삭제
21	●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	삭제	21	●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	삭제
22	●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	삭제			
23	●직무관련자 거래 신고	삭제			

※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상 23개 행위기준 중 8개 규정 삭제(15개 규정 유지)
 「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」 상 21개 행위기준 중 7개 규정 삭제(14개 규정 유지)